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2
----------	-----

발의연월일 : 2024. 6. 19.

발 의 자 : 소병훈 · 박 정 · 백승아
장철민 · 윤준병 · 정성호
윤건영 · 김준혁 · 안태준
허 영 · 박희승 · 안호영
김교홍 · 정준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청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음.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며,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

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최장 9개월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형벌체계에 맞추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역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단서).

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연장, 종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통지의무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상실 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의7 신설).

라. 법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결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기각된 경우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바.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9조제1항제2호에”를 각각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17조의6제2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9조제1항제3호에”를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17조의6제2항제2호에”로 한다.

제9조제7항 단서 중 “두 차례”를 “세 차례”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 · 기간연장 · 변경에 관한 업무

제2장의2(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관할은 스톱킹 행위자의 행위지 ·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으로 한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조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다.

⑦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⑧ 제7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 등)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

항이나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⑤ 피해자보호명령(제3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
3.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제17조의8(임시보호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7조의 7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9(항고와 재항고) ①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원심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10(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위한 조사·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7조의6제2항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제1항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보호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6 및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 다.	⑥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같 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2. ----- ----- ----- ----- -----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스톱킹 행 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 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 거인, 가족으로 하는 <u>제9 조제1항제2호</u> 에 따른 조치 의 결정	가. ----- ----- ----- ----- -----제9 조제1항제2호 또는 제17조 의6제2항제1호에-----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나. ----- -----

<p>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등으로 하는 <u>제9조제1항제2호에</u> 따른 조치의 결정</p>	<p>----- ----- -----<u>제9조제1항제2호</u> 또는 <u>제17조의6제2항제1호에</u>-----</p>
<p>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u>제9조제1항제3호에</u> 따른 조치의 결정</p>	<p>다. ----- ----- ----- ----- -----<u>제9조제1항제3호</u> 또는 <u>제17조의6제2항제2호에</u>-----</p>
<p>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 ⑥ (생략)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u>두 차례</u>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 -----<u>세 차례</u>----- ----- -----.</p>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신 설>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2항 각 호
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
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조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다.

⑦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

<신 설>

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⑧ 제7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 등)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
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
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피해
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
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
였을 때에는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
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
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
복방법 등 고지

⑤ 피해자보호명령(제3항에 따
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
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

3.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제17조의8(임시보호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7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9(항고와 재항고) ①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원심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10(위임규정) 피해자보호

<p>제18조(스토킹범죄) ① (생략)</p> <p>② <u>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20조(벌칙) ① ~ ④ (생략)</p> <p><u><신설></u></p>	<p><u>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위한 조사·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8조(스토킹범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p> <p>1. <u>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u></p> <p>2. <u>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u></p> <p>제20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17조의6제2항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제1항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	---